



2013. 12.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I .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1
II . 도시계획 연구모임 개요	7
III . 그동안 활동경과	13
1. 준비모임 활동(1차)	15
2. 연구모임 활동(2차)	16
3. 연구모임 활동(3차)	17
4. 연구모임 활동(4차)	19
5. 연구모임 활동(5차)	20
6. 연구모임 현장방문(6차)	21
7. 연구모임 활동(7차)	22



IV. 연구 자료 23

- 1.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25
- 2. 항공부대 이전 31
- 3. 유류지원대 토양오염정화사업 38
- 4.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자료 42

V. 전문가 제언 61

VI. 기타 자료 67

- 1.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69
- 2. 보도자료 등 74

1.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I.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이 경 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연구모임 회장



이 연구회는 명품 세종시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로 인해 세종시 도시계획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군부대 이전을 올해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입장에서 군부대 이전을 바라보면서 세종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인 논리개발과 조화롭고 균형적인 도시를 개발하고자 시작 하였습니다.

3월에 7명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3,4,7,9월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모임의 향후 발전방향과 군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11월에는 소정면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를 현장방문하여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올해 활동을 결산하는 마무리 회의를 갖고 연구모임에서 이끌어 낸 성과를 평가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출범한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주민, 군부대 및 세종시 집행부와 접촉을 통해 일부 비행장의 폐쇄, 유류지원대의 이전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6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종시 관계자와의 협의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주민여론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룩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2013년 성과가 이루어진 비행장 폐쇄 합병과 유류지원대 이전 노력은 세종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결과물로, 앞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민대표로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군부대 이전상황을 지켜보고 군부대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차원의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이루어진 활동이었지만, 바쁜시간에도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용 수
세종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회원 강용수 의원입니다.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인 항공기지, 유류 지원, 탄약 보급 등의 시설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도시계획연구모임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되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 점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특히 보통리 비행장을 폐쇄하고 고도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것으로 군부대와 조정서를 작성한 것은 연구모임 성과물 이전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회 활동을 통한 정책이 세종시 의정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동료의원님과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선 무

세종시의회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회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로 인해 세종시 도시계획에 어려움을 가져 온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군부대 이전을 올해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3년 4월 1일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을 출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첫해에 만들어낸 비행장 폐쇄와 유류지원대 이전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연서면 항공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항공기지 구역 축소와 비행항로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소정면 33유류지원대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6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세종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참여와 지원을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I. 도시계획 연구모임 개요

1. 목 적
2. 추진방향
3. 사업개요

II. 연구모임 개요

1.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계획을 연구하여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화롭고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2013년도에는 세종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단절되지 않는 도시계획을 위해 이전시기를 앞당기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개발자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군부대 이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따른 세종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인 논리 개발이 목표임

2. 추진방향

-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당위성을 긍정적 여론 부각
- 군부대 주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재산권 행사 강화 조치
-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논리의 타당성을 지원하고 향후 도시계획에 참여
- 현장 조사를 통한 이전 필요성을 객관화하고 공감대 형성

3. 사업개요

- 모 임 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 과 제 명 : 세종특별자치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연구
- 대 표 자 : 이 경 대 의원
- 사업대상 : 지역 주민 및 세종시 주둔 군부대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사업내용
 - 세종시 군부대 현황 파악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이전의 필요성 부각
 - 현장 조사 후 워크숍 개최하고 세미나를 통해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개발
 - 연구보고서를 발간, 활동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배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이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도

4. 참여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이 경 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간 사	김 연 오	세종균형발전협의회원	
회 원	강 용 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 선 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 정 섭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조 수 창	세종시청 균형발전담당관	
	강 성 규	세종시청 도시건축과장	

5.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개요 : 군부대 이전 관련 전문가 연구 및 모임활동 지원
- 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및 모임 발족, 수시 회동
 - 사업비 : 1,000천원

(2)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 및 도시계획상 당위성 분석 보고

- 개요 : 군부대가 명품도시 건설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 내용 : 전문가 조사 및 분석(조사비, 분석비)
- 사업비 : 1,000천원

(3)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개요 : 군부대 현장 방문과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 및 주민 입장에서 당위성 부각
- 내용 : 현장 방문 (현장방문 교통비)
- 사업비 : 2,000천원

(4)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013년 동안 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연구 성과 공유
- 세미나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론적인 근거 제시

- 종합보고서 발간으로 군부대 이전이 지속사업으로 확대
- 사업비 : 1,000천원

6.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3년 1월 중
- 연구회 발족 및 정기 모임 : 2013년 3월중
- 군부대 실태 파악 및 도시계획 조사 : 2013년 3월 ~ 8월
- 현장 방문 및 주민 불편사항 파악 : 2013년 5월중
- 수시 모임 및 간담회 개최 : 2013년 9월 중
- 세미나 및 보고서 발간 : 2013년 11월 중

7. 기대효과

- 군부대가 세종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여론 조성
-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밀착형 의정 활동 실현에 따른 긍정적 효과
-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완벽한 도시 계획을 이끌어내는 기반 조성

Ⅲ. 그동안 활동경과

1. 준비모임 활동(1차)
2. 연구모임 활동(2차)
3. 연구모임 활동(3차)
4. 연구모임 활동(4차)
5. 연구모임 활동(5차)
6. 연구모임 현장방문(6차)
7. 연구모임 활동(7차)

Ⅲ. 그동안 연구활동 결과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준비 모임 (1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10: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별관 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 주요내용 : 항공부대 관련 주민 불편사항 청취

□ 주요 의견

- 사유재산권 제한은 물론 일상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의회와 시에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해소 요구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준비 모임 (2차)

□ 개최 개요

- 일시 : 2013년 3월 22일 (금) 14:00
- 장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참석인원 : 약 30명 (항공부대 지역 이장단)
- 주요안건 : 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협의

□ 회의 결과

- 주민설명회(1.24)에서 건의된 주민불편사항 처리사항 설명
- 민간대책위원회 집행부 구성 (진행: 김선무 의회 부의장)
 - 회장 : 차선광 (월하4리장)
 - 부회장 : 이송원 (쌍전리장), 유양준 (월하3리장)
 - 총무 : 김학기 (번암리장), 감사 : 유현준 (국촌리장)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3차)

□ 개최 개요

- 일시 : 2013년 4월 1일(월) 14:00
- 장소 : 세종시청 3층 대강당
- 참석인원 : 약 100명
- 주요내용 : 창립기념식, 연구모임 토의 등
- 주관 :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간	소요시간	행사내용	비 고
14:00 ~ 14:05	5분	개회식	
		개회, 참석자소개	
		국민의례	
14:05 ~ 14:15	10분	축사, 인사말씀	
14:15 ~ 15:00	45분	지정 및 자유토론	

□ 주요 내용

- 군부대 실태 파악 및 도시계획 조사
-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 부각
- 군부대 이전 여론 형성과 주민 의견 수렴



- 창립식 모습 -



- 창립식 후 주민과 함께 -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4차)

□ 개최 개요

- 일시 : 2013년 7월 30일(화) 15:00
- 장소 : 세종 시민회관
- 참석인원 : 약 350명(시민, 시의원,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공청회, 연구모임 토의 등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 내용

-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 전문가 의견발표 및 토론(6인)
- 질의 응답 및 시민의견 청취
- 의견제시 총괄 : 총 114건(37명) 의견제시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5차)

□ 개최 개요

- 일시 : 2013년 9월 25일(수) 09:00
- 장소 : 세종시의회 소회의장
- 참석인원 : 7명
- 주요안건 :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주요 의견

- 조치원 외곽에 위치한 예전 32사단 주력부대가 국곡리로 이전된 만큼 항공부대 이전도 검토 필요
- 항공부대 이전에는 율하리를 비롯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현장방문 (6차)

□ 방문 개요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14:00
- 장 소 : 종합보급창 제33유류지원대(소정면 소정리 소재)
- 참석인원 : 20명
- 주요내용 : 부대이전계획 및 토양보전공사 현황 청취

□ 현장방문 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	행사내용	비 고
14:00 ~ 14:05	5분	도착 및 접견	
14:05 ~ 14:08	3분	사진촬영	
14:08 ~ 14:10	2분	위문품 전달	
14:10 ~ 14:30	20분	현황청취 및 질의	
14:30 ~ 15:00	30분	시설물견학	
15:00 ~ 15:30	30분	귀청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7차)

□ 개최 개요

-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14:00
- 장소 : 세종시의회 부의장실
- 참석인원 : 7명
- 주요안건 : 연구모임 결산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

□ 주요 발언내용

- 항공기지 구역 축소와 비행항로 조정 등의 조치 환영
- 군부대가 지역발전 저해하는 일 없도록 의회차원의 감시활동 추진
- 도시계획 연구모임 첫해에 비행장 폐쇄 합병과 유류지원대 이전 성과를 거두고 세종시 지역발전에 기여함



IV. 연구 자료

1.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2. 항공부대 이전
3. 유류지원대 토양오염정화사업
4.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자료

IV. 연구자료

1.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지역균형개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광역자치단체 위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 7.1)

⇒ 통합적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마련 필요



□ 계획의 목적

- 2012. 7. 1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여건변화를 예측·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형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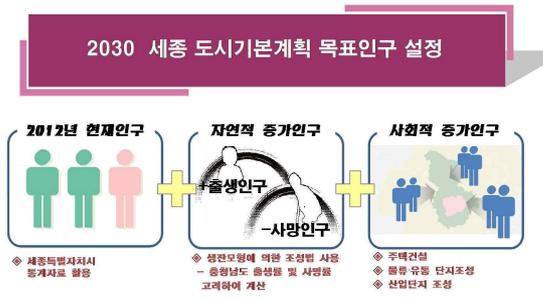
□ 계획의 목적

슬로건	미 래 상	추진전략(핵심 추진과제)
어울림과 창조 일류도시 “세종”	국가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는 “ 행정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기능 수행 ▶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의료복지기능 담당 ▶ 행정지원 등 기능보완 및 분담체계 확립
	지역·세대·계층간 조화로운 “ 상생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간 연계 및 교류 강화 ▶ 읍·면지역과 건설지역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 도·농 통합형 도시로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역사·문화·사람·과학이 소통하는 “ 교류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거점 조성 ▶ 전통문화 및 체험형 관광휴양지 조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프로그램 제공 ▶ 첨단과학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 자족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 구축 ▶ 첨단R&D 연구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신성장(첨단산업) 기반 마련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 친환경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 친환경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 ▶ 도시·생태·환경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 2030년 인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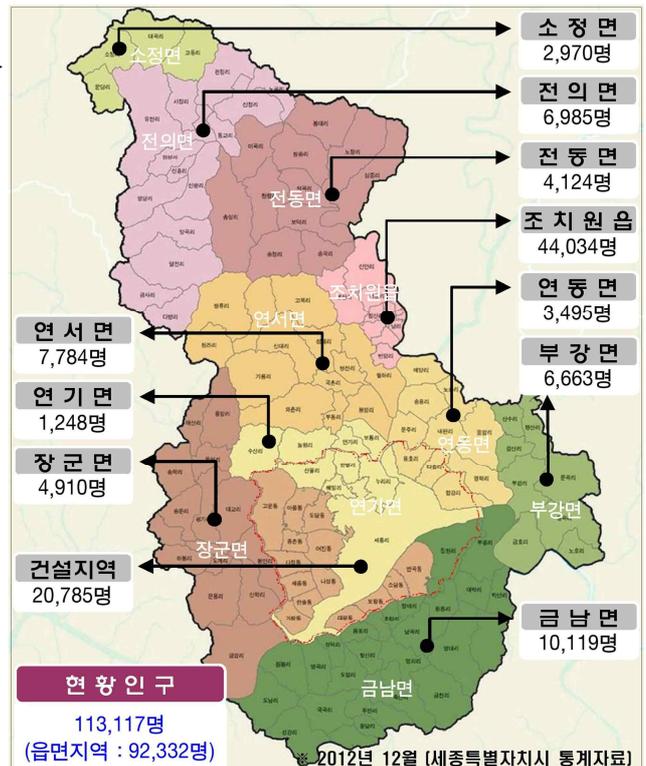
◎ 설정기준

- 자연적 증가인구(생잔법)와 사회적 증가인구에 의한 추계방법 적용



◎ 2030년 계획인구 : 약 80만명

구분	현황인구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계획인구
읍·면 지역	약 9.2만명	약 0.2만명	약 20.6만명	30만명
건설 지역	약 2.0만명	약 48.0만명		50만명



- 자연적 증가인구
 -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 :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 → 순수 자연증가분만 반영
- 사회적 증가인구
 - 2020년 연기군기본계획 상 포함된 사업 중 완료된 사업과 충청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 세종시 외 지역사업 제외
 - 신규사업 추가 등(중장기발전방안연구, 세종시 출범 후 사업 고려)

구분	주요사업	면적 (천㎡)	유발인구 (인)	외부유입률 (%)	총 유입 인구(인)
합 계		26,925	415,585	20~60	205,900
주택건설 (10개소)	○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 서창 도시개발사업 등	3,630	52,480	60~100	31,900
물류·유통 단지조성 (2개소)	○ 농축산물 유통단지 ○ 세종북부물류유통단지	420	6,250	50	5,900
산업단지 조성 등 (19개소)	○ 세종 미래산업단지(LED) ○ 고등지구산업단지 등 ○ 충청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8개소)	22,875	185,031	20~50	168,100

□ 그동안 추진경위

- 2012. 10. 08 :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2. 10. 26 : 착수보고
- 2012. 12. 11 : 국토연구원 협의(국토계획평가 시행 관련)
- 2012. 12. 13 : 세종시 관련계획 수행용역팀 협의
- 2013. 02. 04 : 행복청 협의(도시미래상 등 추진사항)
- 2013. 02. 22 :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3. 03. 14 ~ 20 : 읍·면별 순회 주민설명회(10회)
- 2013. 04. 08 : 의회 설명(간담회)
- 2013. 05. 09 : 중간보고
- 2013. 06. 19 :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개최
- 2013. 07. 11 : 최종보고
- 2013. 07. 30 : 시민공청회
- 2013. 09. 04 : 시의회의견청취
- 2013. 10.11 ~ 11.11 :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 설명회 일정 : 2013. 3. 14 ~ 3. 20(1주일간)

3.14(목)	3.15(금)	3.18(월)	3.19(화)	3.20(수)
연기/연동	부강/금남	장군/연서	전동/전의/소정	조치원

- 장 소 : 읍·면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560명(주민 480, 시의원 8, 공무원·용역사 등 72)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및 수립절차
 - 세종시 현황분석 및 인구지표(2030년 71.1만명)
 - 도시미래상 설정(어울림과 창조의 일류도시 “세종”)
 -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주요 개발방향 등

< 주요 주민의견 >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안사업 요구(산단, 대학, 관광 등)
- 주거환경 개선(환경개선, 주택건설 등)
- 기반시설 정비
- 규제사항 완화(용도지역 변경) 또는 강화(난개발 방지) 등

□ 시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 일 시 : 2013. 7. 30(수) 15:00 ~ 17:30
- 장 소 : 세종 시민회관
- 참 석 : 350여명(시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경과보고
 -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 전문가 의견발표 및 토론(6인)
 - 질의응답 및 시민의견 청취

□ 세종시의회(연구모임) 의견 제시

- 본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통합적인 공간구조 및 미래상 제시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건설지역의 건설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과 하위계획의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 금번 계획안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획인구를 보면 건설 지역 50만명을 포함하여 총 80만명을 계획하였는바, 세종시의 설치목적이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는 만큼, 수도권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방안을 마련하여 주변의 대전 광역시나 충청남·북도 등과 연계한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 80만명의 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세종시의 원래 목표에도 부합이 됨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근간이 되는 건설지역의 역할 및 개발방향 등을 고려한 도시미래상 및 생활권 구상을 수립하였으나, 국가중추행정기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와 연계한 도시미래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며, 빠르게 변화되는 공간구조와 도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와 더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간, 읍·면지역내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체계 확립과 본 계획의 다양한 접근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나 향후 세종시의 재정 자립, 개발여건, 유지·관리보수비용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이 필요
- 한편, 건설지역의 건설과 더불어 건설지역과 인접한 장군, 연서, 부강, 금남면지역에서 무분별한 건축 및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 기본계획에 포함된 “방재 및 안전계획”은 일반적인 방재에 대한 계획으로서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집중 호우,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진·태풍·해일 대피시설 등 세종시의 재해유형별 방재대책이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장래 청주국제공항과 오송(KTX)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세종시의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천안~청주공항선 복선전철화와 대전권과 연결을 위한 대전 도시철도1호선 연결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어 본 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항공부대 이전

□ 부대 현황

- 부대명 : 조치원·연기비행장 (505항공기지 및 532항공기지)

구 분	위 치	부대 기능	기지면적	제한구역	근 거
505기지 (조치원비행장)	연서면 월하리	지원항공 작전기지	0.452km ²	15.85km ²	'02.5.28고시
532기지 (연기비행장)	연기면 연기리	헬기전용 작전기지	0.098km ²	1.22km ²	'02.5.29고시

□ 그동안 추진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

-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군부대 이전 촉구, 심대평 前의원) : '11.9
- 군부대 이전 국무총리실 건의 : '12.2월
- 이해찬 의원 및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건의 : '12.9.25~26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 '12.10.30 이후 진행 중
 - * 유양준 외 89명 (항공기지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재산권 제한 등 문제) / 민사소송 병행
-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시장 면담 : '12.12.5
- 행정부시장 육군본부 방문 참모차장 면담 : '13.1.21
- 항공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시청 방문 시장 면담 : '13.1.23
- 주민설명회(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 리장 등) 개최 : '13.1.24
 - * 별관 회의실 / 군부대인근 리장 등 50여명 참석 / 주민불편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 *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제한, 주택균열·난청·정비소 매연·정화조 악취 등 생활불편
- 시장 국방부 방문 제1차관 면담 : ' 13.1.29

- 국방부 및 합참 방문 면담 : ' 13.2.25
- 군부대이전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회장 차선평) : ' 13.3.22
- 시의회 군부대이전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 발족 : ' 13.4.1
- 국방부 면담 : ' 13.7.24
- 시장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 면담 : ' 13.7.26
- 주민대책위(4회), 운용 군부대(5회), 권익위(12회) 협의

< 국민권익위원회 >

- '12. 4. 19. : 유○○ 외 ○○명(비행장 이전 또는 비행안전구역완화 요구)
- '12. 12. 7. : 고충처리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접견
- '13. 5. 22. : 차○○ 외 지역주민 ○,○○○명 집단 민원신청
- '13. 5. 22. ~ : 고충민원 관련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총청시설단 등
- '13. 6. 13.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합동현장 확인
- '13. 6. 28.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차)
- '13. 7. 1./3.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3차)
- '13. 7. 10. :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국조실 권익위)
- '13. 7. 17. ~ 18.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차)
- '13. 7. 24.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5차)
- '13. 7. 25. ~ 26.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6차)

- ‘13. 7. 29.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7차)
- ‘13. 7. 29.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8차)
- ‘13. 8. 27.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9차)
- ‘13. 9. 2. ~ 3. :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0차)
- ‘13. 9. 5. : 집단 고충민원 조정해결을 관계기관 사전협의(11차)

□ 항공부대 이전관련 조정서

조 정 서	
민원포시	2BA-○○○○-213276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이전 등
일자·장소	2013. 9. 27.(금), 세종특별자치시청 3층 대회의실
신청인	세종특별자치시 ○○면 ○○○길 ○○ 차○○ 외 2,599명
피신청인 1	세종특별자치시장
피신청인 2	육군 제32보병사단장
피신청인 3	육군 제2작전사령관
피신청인 4	육군항공작전사령관
피신청인 5	육군항공학교장
관계기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민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의 ①조치원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있고, 헬기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이 불편하며, ②사용하지 않는 연기비행장으로 인해 균형된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니, 비행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입장

가. 피신청인1(세종특별자치시장)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전 등이 조치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軍)이 비행장 통합을 결정하면, 제반사항을 지원 및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2(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항공학교가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의 통합에 동의하면 관할부대장으로서 제반사항을 조치하겠다.

다. 피신청인3(육군 제2작전사령관)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을 통합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면 비행장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치하겠다.

라. 피신청인4(육군항공작전사령관)

세종특별자치시가 비행장 통합에 따른 항공 및 병영시설 등을 지원하면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 통합에 동의한다.

마. 피신청인5(육군항공학교장)

연기비행장을 대체할 수 있는 비행장을 선 제공할 경우, 연기비행장의 폐쇄가 가능하다.

바. 관계기관(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재산관리부대장으로서 관할부대장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겠다.

3.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1(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통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피신청인2, 3, 4, 5,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 12. 31.까지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통합에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278 일원의 토지, 면적, 군사시설(항공, 작전) 등 국방·군사 시설건립을 위한 사업방식과 제반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협의체는 격월 주기로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2) 협의체의 협의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278 일원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고 연기비행장 부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기리 66-1 일원)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 (3) 본 조정서 및 피신청인2, 3, 4, 5,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 승인을 신청하고,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건의)한다.
- (4) 국방부가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을 승인하고,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면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가칭 '연기 비행장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을 추진한다.
- (5)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가칭 '연기비행장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을 완료하면 피신청인2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을 건의한다.
- (6) 기타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반기 1회 비행장 통합 관련 사항을 주민대표에게 설명하며, 주민피해방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나. 피신청인2(육군 제32보병사단장), 3(육군 제2작전사령관), 4(육군항공작전사령관), 5(육군항공학교장), 관계기관(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은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통합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각 추진한다.

- (1) 피신청인2, 3, 4, 5는 피신청인 1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건의)한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에 대하여 작전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등 제반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2) 피신청인5는 피신청인1이 조성하는 헬기 이·착륙을 위한 보조훈련장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한다.
- (3)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 '을 완료하면, 피신청인 3을 경유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을 건의한다.

다. 관계기관(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은 국방부장관이 피신청인1의 국방·군

사 시설 관련 사업(가칭 '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 ')을 승인하면, 충청 지역 재산관리부대장으로서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라. 신청인들은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피신청인1, 2, 3, 4, 5, 관계기관은 조정합의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협의체 협의결과와 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통보한다.

바. 기타 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신청인1, 2, 3, 4, 5,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1, 2, 3, 4, 5, 관계기관은 위의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합의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신청인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면 ○○○길 ○○	차 ○ ○	
피신청인 1	세종특별자치시장	유 한 식	
피신청인 2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소장	김 ○ ○
피신청인 3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김 ○ ○
	업무수행자 작전처장	육군 준장	박 ○ ○
피신청인 4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 중장	김 ○ ○
피신청인 5	육군항공학교장	육군 준장	장 ○ ○
관계기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공군 대령	이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 세종시 군부대 현황

(2013. 1월 현재)

부 대 명 칭	부 대 위 치	면적(km ²)		비 고
		통제보호 구 역	제한보호 구 역	
G505 항공기지부대	연동면, 연서면, 조치원읍		20.26	항공부대 소계: 21.49km ²
G532 항공기지부대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1.23	
제11탄약창	전의면		8.57	
제33유류지원대	소정면, 전의면		0.94	
32사단사령부	금남면	3.45		
종합보급창	부강면	1.12		
203특공여단, ○○여단	연서면	0.46		
국방과학연구소 (ADD)	금남면	1.68		
육군 방공학교	연기면	0.1		
소 계		6.81	31.00	
총 계		37.81		

3. 유류지원대 토양오염정화사업

□ 부대 현황

- 부대명 : 33유류지원대
- 위 치 : 소정면 소정리 일원

□ 이전관련 동향

-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33유류지원대)
 - '13~' 16년에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 중
 - * 부대특성상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유류오염 토양 정화 필요 (토양환경보전법)
- 국방부 차원의 군부대 이전계획 미수립
 -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군 시설 건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 필요

□ 향후 계획

- 이전계획 수립 동향 파악 : 계속
- 해당부지 활용 방안 마련 : '16년말 이후 (토양오염 정화 후)

< 33유류지원대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소정면 소정리 33유류지원대
- 발 주 처 : 국방시설본부 / 위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시 공 사 : 대일이앤씨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13. 4. 1 ~ 2015. 6. 1까지
- 사 업 비 : 8,030백만원(최초계약 : 11,681백만원)
- 사업내역 : 유류저장탱크 총20기 약 88,984kl, 송유관 14.2km
 - 기타오염원 : 드럼야적장, 소규모유류저장시설, 우수분리조, 사격장

□ 오염현황

- 조사기간 : 2011. 11. 10 ~ 12. 20
- 조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오염물질
 - 석유계탄화수소(TPH)
 - 납(Pb)

□ 추진경과

- 1984. 09 : 부대설치 및 유류저장
- 2004. 01 : 유류수송체계 전환(송유관 → 화차 및 배관)
- 2009. 12 :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확산방지시설 설치
- 2011. 07 : 토양오염조치 명령
- 2013. 03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기관 선정
- 2013. 04 : 계약체결(국군재정관리단 ↔ 한국농어촌공사)

- 2013. 06 :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 대일이엔씨컨소시엄)
- 2013. 08 : 실시설계 30% 심의(8.9), 실시설계 60% 심의(8.27)
- 2013. 09 : 자문회의(2013.9.12), 실시설계 90% 심의(9.23)
- 2013. 11 : 원가타당성검토 완료 및 설계도서 제출
- 2013. 12 : 실시설계 심의(12.3), 확정계약 체결(12.20)

□ 앞으로 계획

- 2015. 5 : 오염토양정화사업 완료

부지현황

1 드럼 아적장

2 유류저장 탱크

3 트럭 주유대

4 화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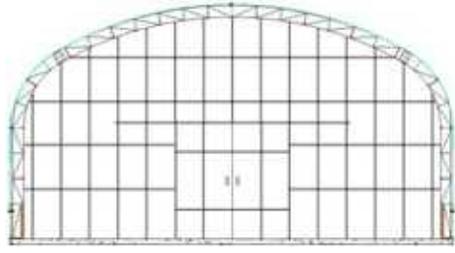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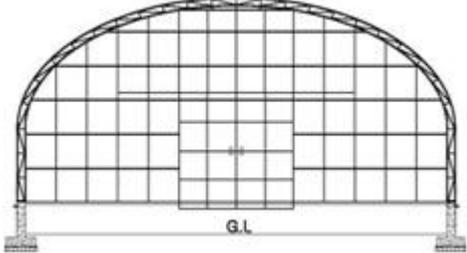
- 오염면적 : 32,046㎡ (부지면적 528,000㎡)
- A구역 : 유류저장구역(유류탱크 7기)
- B구역 : 유류저장구역(유류탱크 13기)
- C구역 : 드럼아적장
- D구역 : 영점사적장
- E구역 : 기타지역
- E1 : 지하유류저장탱크
- E2 : 유류보관소
- E3 : 화차지역
- 오염개연성 유류탱크

5 분배 대기관실

6 부대막사

7 드럼 세척장

□ 토양경작장 비교

항 목	33유류지원대 설계경작장	LPP 하우스 경작장
기본구조	아치형트러스 구조	아치형트러스 구조
설치단면도		
규 격	너비 : 15m, 높이 : 8.2m 길이 : 90m(3동), 55m(4동)	너비 : 15m, 높이 : 8.2m, 길이 : 100m(4동)
총 면적	7,350㎡	6,000㎡
기초구조	무근콘크리트 (기존 콘크리트 패드 일부이용)	철근콘크리트
HDPE 필름	없음	설치
하부구조 금액	26,487원/㎡	65,141원/㎡
상부구조 금액	86,639원/㎡	59,897원/㎡
합계 금액	113,126원/㎡	125,038원/㎡

□ 토양경작장 설치

토양경작장은 기본적으로 강우와 동절기 기온강하에 의한 교차오염발생 및 처리효율 저하를 사전방지하고, 정화과정 중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해 철골구조(아치형 구조)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바닥면은 토사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성 재질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 하였음. 또한 대상부지가 위치하는 세종지역의 최대 풍속과 최심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 구조안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경작장을 설계하였음.

대상구역 굴착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경작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토양경작장 면적은 처리토량, lbatch 운전일수 및 오염토 적치심도와 예상 운영기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음

4.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자료

가. 국방 · 군사시설 현황

□ 국방시설의 정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 ①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②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 ③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 ④ 진지 구축시설
- ⑤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⑥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
- ⑦ 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의함

□ 국방·군사시설 현황

- 2008년 말 기준 국방·군사시설 중 토지는 총 19만 9,887 필지에 달함
- 2008년 말 기준 지역별 토지는 경기도(7만 3,357), 강원도(4만 2,825), 충청북도(1만3,002), 경상북도(1만 2,732) 등임

[국방·군사시설의 지목별 토지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천㎡)	구분	필지수	면적(천㎡)
계	199,887	1,187,640	유원지	12	12
공원	728	4,897	유지	453	1,037
공장용지	37	85	임야	42,406	759,671
과수원	262	819	잡종지	35,654	210,097
구거	3,303	5,080	전	46,306	88,010
답	33,342	63,662	제방	472	407
대	11,204	23,509	종교용지	36	45
도로	21,324	13,660	창고용지	23	29
목장용지	174	7,485	철도용지	485	495
묘지	1,016	2,057	체육용하천지	61	815
사적지	5	11	하천	1,738	3,284
수도용지	171	631	학교용지	224	1,709
염전	42	83	기타	409	50

출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2009. 1

[국방·군사시설의 토지 및 건물 현황]

시도별	토지		건물		비고
	필지수	면적(천㎡)	동수	면적(천㎡)	
계	199,887	1,187,640	97,041	26,507	
서울특별시	3,128	15,676	2,434	1,810	
부산광역시	3,699	27,847	1,681	608	
대구광역시	2,335	15,165	1,736	801	
인천광역시	4,392	28,267	3,795	911	
광주광역시	2,434	19,390	1,212	311	
대전광역시	3,882	12,746	1,102	939	
울산광역시	483	1,544	412	41	
경기도	73,357	403,156	34,191	7,551	
강원도	42,825	271,547	27,149	4,937	
충청북도	13,002	65,798	4,071	1,454	
충청남도	12,250	75,323	4,899	1,974	
전라북도	62,80	31,869	2,633	566	
전라남도	10,797	64,791	2,670	859	
경상북도	12,732	72,674	4,412	1,492	
경상남도	7,705	77,262	4,213	2,150	
제주특별자치시	586	4,585	431	103	

출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2009. 1

- 2001년 소유주별 국토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 국토 면적 99,762.7km² 중 1.3%에 해당하는 1,268.8km²가 국방부 관할 토지이고, 군사시설 보호지구 등 국방관련 제한 면적을 합하면 8,050km²(전 국토면적 대비 6.8%)에 달함

[소유주별 국토면적 현황(2001.9기준)]

구분	국공유지(km ²)	사유지(km ²)	계(km ²)
전 국토 면적(a)	21,817.0 (21.9%)	77,945.7 (78.1%)	99,762.7 (100.0%)
국방부 관할 토지(b)	1,225.8 (96.6%)	43.0 (3.4%)	1,268.8 (100.0%)
군사시설보호구역(c)		6,781.2	
국방관련 제한토지(d:b+c)		8,050.0	
국방부 관할 토지 비율 (b/a)		1.3%	
군사보호구역 비율 (c/a)		6.8%	
군용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비율(c/b)		5.3배	

출처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 2001. p12

- 종전에는 도시의 외곽에 입지했던 국방·군사시설이 도시화 및 도시 확산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시 내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입지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민원 및 이전요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 지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보호구역 조정	군사시설 이전	행정위탁	규제완화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	협의 및 형평성	기타	합계
합계	16 (13.9)	19 (16.5)	24 (20.9)	13 (11.3)	11 (9.6)	23 (20.0)	9 (7.8)	115 (100.0)
경기남부	9 (18.4)	13 (26.5)	4 (8.2)	5 (10.2)	8 (16.3)	6 (12.2)	4 (8.2)	49 (100.0)
경기북부	7 (10.6)	6 (9.1)	20 (30.3)	8 (12.1)	3 (4.5)	17 (25.8)	5 (7.6)	66 (100.0)

출처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 2001. p12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현황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사업이 42건,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이전사업이 53건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육군 22건, 해군 2건, 공군 2건, 국직 16건으로 총 42건임. 또한 총사업비는 육군 7,356억 원, 해군 283억 원, 공군 882억 원, 국직 6,919억 원으로 총 1조 5,440억 원임1)
 -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현황은 육군 46건, 해군 3건, 국직 4건 총 53건이고 총 기부재산은 4조 4,138억 원, 총 양여재산은 3조 8,299억 원임2)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건수와 총 사업비를 비교해보았을 때 사업 소요는 주로 육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의한 최근 5년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09년 예산	09년 사업내용	비고
육군	7,356	최근 5년간 기준	1,638	시설공사, 토지매입 등	
해군	283	최근 5년간 기준	-	-	
공군	882	최근 5년간 기준	120	시설공사, 토지매입 등	
국직	6,919	최근 5년간 기준	75	시설공사	

출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2009.1,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 법제화 연구 2010. 8

나. 국방·군사시설 여건변화

1) 국토종합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접경지역 개발과 보전은 안보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
- 수도권 과밀화로 안보에 취약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DMZ은 주변 환경과 연계 관리
- 남북한 간 단절된 육상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 추진
- 서해와 동해안의 남북한 항구를 국적선이 정기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연안 수송 체계 구축
-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국토 종합계획의 범정부적 추진기구로 국토균형발전 기획단 설치 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안보적 차원의 군사시설 관련분야를 반영하여 정부계획과 연계된 군사시설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마련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심 군사시설의 이전 및 통합 추진, 대규모 훈련장과 교육기관, 병영, 주거, 복지시설의 패키지화 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민·관·군 공존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군사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

- 군사시설 확보 및 주변 지역 지원, 환경보존 등과 관련한 법령체계와 지원제도를 반영

2) 국방시설 관련 민원

□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민원

-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군사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훈련여건등 군 운영환경이 불안정하게 되었음
 -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생각으로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
 - 반면, 이전예정 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른바 군사시설에 대한 ‘NIMBY’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임
- 또한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군부대 주둔여건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어 있어서 군사기지의 조정과 이전 소요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기지의 조정은 군의 작전 계획에 변화를 요구함
- 이러한 여건에서 군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 배치 및 조정을 고려하여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과 군사시설계획을 연계시켜 추진하여야 함

□ 환경공해 관련 민원

- 국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진동, 오염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반면 환경법규 및 관리지침의 미비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 시 군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함
- 따라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종합적 환경관리 대책의 수립

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환
경적인 군 운용관리체계의 정착이 요구됨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원

- 주민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연대 결성으로
집단행동, 언론보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쟁점화 되어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도시계획, 택지개발, 공단조
성, 관광지역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협의 요청이 증가
되고 있음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원 및 협의업무 증가추이]

(단위 : 건)

구분	'06년	'07년	'08년	비고
민원업무	1,671	2,406	2,564	'06년 대비 53.4% 증가
협의업무	12,967	14,522	13,604	'06년 대비 4.9% 증가

출처 :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 법제화 연구 20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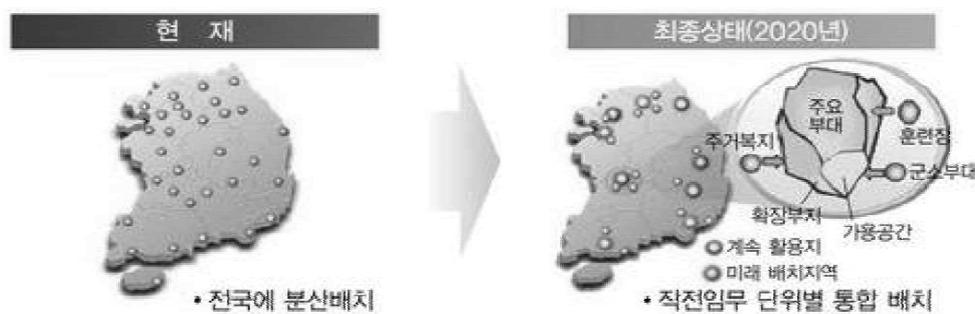
3) 국방개혁 기본계획(2020)

□ 계획수립 목적

-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비소요 반영
-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 조정
- 국가위상 제고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군사력소요를 반영
- 국방경영의 경제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 강구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

□ 국방자원 및 시설의 경제적 운영

-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확대로 작전지원체제 변혁
 - 군 보유자산은 전투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지원기능은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
- 유사·중복기능부대 통·폐합 및 조직 슬림화
 - 각 군의 근무지원 분야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간 지휘 계층을 슬림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과 예산을 절감
 - 유사기능 통·폐합 : 각 군 중앙경리단·인쇄창·복지단, 시설조직 (병력 5,000여 명/예산 400여억 원 절감 예상)
 - 조직 슬림화 :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통대 근무지원단, 각 군 일반행정병 감축 등(병력 2,000여 명/예산 70여억 원 절감 예상)
- 효율적인 부대 재배치 추진
 - 군 구조개편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군부대를 작전임무 수행여건 보장 범위 내에서 대단위로 통합배치
- 부대 재배치로 발생하는 잉여군용지를 활용하여 소요자원 확보



4) 국방 ·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

가) 부대위치 조정계획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사시설 재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부대·시설별 연도별 재배치 계획, 연도별 세입·세출을 종합한 재배치 사업 추진계획(군사시설 종합발전 계획) 수립

○ 주둔지 개소 축소 조정 : 현재 대비 67% 감축

나) 추진경과

○ 군 구조개편에 따른 군사시설의 위치를 작전임무를 고려하여 대규모로 통합하는 부대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 '08. 9월 각 군,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 '09. 5 ~ ' 11월 각 군, 재배치 기본계획(안) 수정 및 보완

* 대규모 통합성을 고려한 재배치 계획으로 수정 보완

- '09. 11월 각 군 재배치 계획 토의(국방부장관 주관)

○ 재배치계획을 근거로 예산소요를 구체화한 「군사시설 종합발전 계획」 작성

- '09. 4월 국방부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안) 1차 보고

- '09. 10 ~ 12월 각 군,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수정(안) 작성

- '10. 1월 국방부,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수정(안)

다) 재배치 계획 수립 개념

○ 부대 통합 및 시설 배치 관련

- 지자체 도시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을 고려

- 도심 부대는 가능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대별 사용면적 적정화

- 기존 군용지를 최대 활용하여 장기 확장 가능한 군용지로 통합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대규모 통합 계획 수립

- 기능별로 시설을 통합·건설하여 부지 소요를 최소화

- 시설은 조밀(Compact)하게 배치하여, 병영시설 등 주요 시설 경계소요가 최소화 되도록 배치

- 연병장은 병영시설 울타리 외부에 통합 설치하고, 부대별로 사용시간대를 정해 효율적활용

○ 주거복지 및 훈련장 시설 설치 관련

- 독신간부(기혼 독신자 포함), 지휘관, 즉각 조치 요원 등의 숙소는 주둔지와 통합하여 건설
- 기혼숙소는 출퇴근 가능 거리 내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단지화
-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하여 훈련장 설치를 계획하여, 부지 매입소요 최소화
- 훈련장 세부발전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추진
-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관리 계획 수립 시 세입·세출 균형 유지

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법규 검토

1) 일반군사시설 이전사업 개요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정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함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대상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음
 - 국방개혁의 군구조개편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지역발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정책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경우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형태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사업(계획사업) 방식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의한 협의사업(수시사업)방식으로 나눔

[국방·군사시설사업 이전 추진형태]

구분	근거	내용	한계점
계획사업 (재정사업)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로 추진하며 지자체와 타 부처와의 행정협의 완료사항만 반영	이전대상 국유재산(토지·건물) 매각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등가원칙 적용으로 매각대금과 이전비용간 차액 보조근거 미약
수시사업 (협의사업)	국유재산법 상 기부·양여방식	기부대상자에 제한이 없어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나 민간사업자는 토지수용권이 없어 자기재산 범위 내 기부만 가능	민·관·군의 협력에 의한 이전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이전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어 이전적지 개발과 연계된 민관합동 개발방식 도입 필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상 기부·양여방식	기부대상자를 지자체정부투자 기관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자로 제한하되 토지수용 권한 제공	

출처 : 기성시가지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연구 2011. 12

□ 기부 · 양여 방식

- 지자체, 공기업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역발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당해 공익사업 지구 내에 국방 ·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서 토지이용 효율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동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
- 개발사업 시행자는 군과 협의하여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군이 작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 기존 국방 ·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군사작전 · 전투준비 · 병영생활 시설 등 군이 필요로 하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
- 시설관리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노후화된 기존 국방 · 군사시설과 그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게 되며, 주로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 도시 및 지역개발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나 공익사업 시행자의 요구로 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로 적용됨

2) 일반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법제 및 시행절차

- 현행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법률은 계획수립단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 회계법,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대표적이며, 이들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이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법체계]

구분	근거	내용
계획수립	-	-
예산확보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법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이전사업 추진
사업시행 (시행자지정 /절차)	국방·군사 시설사업법	사업시행자를 국방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규정 군사시설의 설치이전과 관련된 절차 규정(실시계획승인, 협의 및 고시, 수용과 사용, 기부 및 양여, 이주택지 양도 등)
군사시설 보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을 동법으로 통합 (07.12.21) - 유사 성격의 보호구역 통합, 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 및 규제 완화 -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 부여
	군용전기통신법	군용통신 보호를 위해 지정한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
용지확보	토지보상법	시설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사용시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관리전환등)에 따라 상이한 회계간 관리전환

출처 : 기성시가지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연구 2011. 12

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사례 분석 및 문제점

1) 타 법률에 의한 계획 및 규제에 의한 사업 지연

-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타 공익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외의 특례 조항을 갖추고 있지 못함

- 특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군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구는 군사시설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한 개념임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입지 특성상 자연녹지 등 최하위 용도지역·지구에 입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설 확장 등의 수요가 발생했을 시 지속적인 대관 협의 수요가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상존
 - * 타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에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처리 되어 추가적인 개발행위 허가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현행 건축법 체계를 국방·군사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로 인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도시계획 절차를 따르고자 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

- 국방대 이전사업의 경우 이전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도시계획 절차를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국방·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
 -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음
 - 또한 국방·군사시설의 위치가 계획도면 상에 노출되어 보안상의 취약성이 발생

□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문제

- 해군 OO함대 사령부의 경우 영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시설 확충이 곤란
 - 부대 전체 면적 중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임야(경사지), 도로 및 연병장 등을 제외하면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전체 면적의 6%에 불과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사업 추진 문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군 OO전투비행단 XX대대본부 신설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전성에 의해 결정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성상 5년마다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관리계획 변경요청에서 승인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부대 →시→도→국토부) 사업추진 곤란
 - * 기존 부대 내의 개발제한구역은 영리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관리계획 수립 반영 완화 검토 필요
- 또한 2009년 2월의 법률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조항(23조)이 삭제되어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시 관련 예산 소요가 급증

□ 자연공원법에 의한 대관협 의 지연

- OO 포대 생활관 신축 사업의 경우, 부대 위치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함
 - 자연공원법에 의해 △△△ 공원 심의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상정했으나,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어 부결됨

□ 기존 건축물 미등재 건축물에 의한 사업 지연

- OO 사격지원대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로 건축협의를 진행되지 못함
 - 기존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정 이전 건축물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문서가 망실되어 건축물 대장 등재가 불가
- 건축법상 지번 상에 미등재 건축물이 1동이라도 있을 경우 신축·증축 협의가 제한되기 때문에,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 증축·신축 시 신규로 불법건축물이 발생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도입에 의한 문제

- 건축 인·허가 절차가 전산화되면서 입력 항목이 국방·군사시설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해 행정 절차 진행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

2)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상충에 의한 사업 지연

-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일종의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됨

□ 지자체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하향에 의한 피해사례

- 청주시 OO 부대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일방적 용도지역 하향 결정으로 부지매입자와의 갈등 및 계약 이행상의 문제 발생
 - 청주시에 위치한 OO부대는 부대이전을 위해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계약을 시행함
 - 계약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다운조닝(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에 의해 부지매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민원제기 및 계약 파기를 요구
 - 이후 국방부의 이의제기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방부는

청주시에 토지매수자와의 갈등해소 및 민사상 책임 부담 및 재정적 피해 부담을 요구

- 부산시의 경우 OO부대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종전부지를 주거·상업용도에서 녹지로 하향조정하여 매입가를 낮추려고 시도
 -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 협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방부에서 부동의 회신하여 계류됨

□ 지자체 사업으로 인한 사업 중단

- OO기지 미사일 발사지역(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부지교환 요구
 - 지자체 물류센터 사업에 활용 요청
 - 공군과 지자체간 합의서 체결로 시설공사 중단, 대체부지 매입 계획 중
 - 시설사업 절차의 많은 부분(각종 인·허가 및 건축협의를)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
- OO 기지 공군 작전시설 설치사업 진행지역에 대해 관할 광역자치 단체가 MRO(항공기정비센터)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사 중단 및 해당 부지 외 지역으로 이전 요구
- 공군 OO 기지 무기 수용시설사업 추진 중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협의를 지연

□ 일방적인 건축협의를 불응

- 공군 F-15K 수용시설 공사 건축협의를 불응사례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지연 통지
 - 「OO시 종합발전계획」 및 범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계획

이므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불가 통지('09.11.13)

-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기지이전 용역결과 전까지 협의가 지연됨을 통지('10.3.17)

* 지자체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지연 및 불가 통보 시, 정상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

3)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

○ 현행 법령상,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법원 판결로 각종 대관협의 시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도 각 군이 시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인 경우에만 공공시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순수 기부채납 사업 등의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

□ 환경영향평가 시점의 문제

○ 제주해군기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진행

○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취지는 기존 법령에 의한 실시계획 처분은 실질적인 '개발계획'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 사업 수행 절차의 변경이 불가피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불분명

○ △△기지 수용시설공사는 기지 일부에 대한 시설신축 사업임

○ 따라서 해당 구역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중이나, 지자체 환경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해 기지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

- 사업비 추가 및 사업기간 연장

□ 국방·군사시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미비로 보상비용 증가

- OO시 영외 탄약고 이전사례의 경우,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 소송 패소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시점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기간 중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보상비용 증가 문제 발생

□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문제

- LH공사의 OO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방부는 작전보완시설로 「OOO천 우자재거점」 등 구축을 요구하였고, 공사에 의한 순수 기부 채납 사업이 추진 중
-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함이 불가피 하나, 관계부서인 국방부 국유재산과에서 동법 적용이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이 불가
 -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곤란
 - 사업시행자 미지정시 양도세 감면 적용불가로 협의보상에 어려움 발생
- * 기부채납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4) 기타 해외사례

□ 국방·군사시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미비로 보상비용 증가

- 체계적인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대상이 먼저 선정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폐쇄 및 재배치를 해야 할 군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종합적 계획이 명문화될 필요성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국무총리령에 의해 군사시설 부지의 폐쇄와 이양을 계획하였음
 - 미국의 경우 ‘기지이전 및 폐쇄(BRAC) 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기지의 재배치 및 폐쇄 계획을 담은 군구조계획(Force Structure Plan)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제안이 있을 때 관련요건(군사시설 이전사업관리규정상의 군 작전, 비용, 행정협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합적 사업추진이 어려움

□ 국토계획등과의 연계 필요

- 장기적으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 확보와 토지이용에 관한 협의를 가능하도록 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정비할 필요
 - 프랑스의 경우 국방부지 재활성화 협약(CRSD)과 재활성화 지역 계획(PLR) 등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함으로써 국토발전 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 의해 이루어진 처리결정은 지방의 계획 당국이나 주의 토지이용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방부는 BRAC위원회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고 각 주 및 지방정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며, 군사시설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재개발 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역재개발청이나 국방부가 승인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BRAC부지의 원활한 매각과 처리를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재개발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자위대법에 공간계획 상에서 군사시설의 제외조항, 특례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경관법, 하천법, 건축기준법 등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 전담기구 설치 및 제도적 보완 필요

- 군사시설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방부 내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필요

-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미국의 군사시설 폐쇄 및 재배치 위원회와 유사한 추진조직 필요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주체들로 구성된 ‘국방부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 합동부처 기획단’과 국방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활동하며 전반적인 지역발전 개발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매각과 관련 하여서는 민간이 전문가가 포함된 ‘자산매각사업단(MRAI)’을 국방부 구조조정본부 산하에 설치하여 국방부의 모든 부동산 매각을 총괄 책임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방조정과를 국방부 조직 내에 두어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있음. 이는 방위 시설의 취득 및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임
-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업무 추진 효율화
- * 우리나라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추진 주체가 국방부로 되어있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 관할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며, 산림법·농지법 등 각종 법률과의 마찰도 불가피한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함
-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조직 및 예산을 담보하는 법령의 정비 및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및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민간 및 공공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군사시설 관련 자료에 대한 DB 구축 및 효과적 활용과 국제적·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체제 구축

V. 전문가 제언

V. 전문가 제언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제언)

최 정 석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ecoparks@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행정으로 특화된 도시를 지향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의 한국 정부의 대표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고 일부 그 결과가 드러나면서, 내 스스로 도시계획가로서 기대했던 세종시의 미래 모습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실망감이 생긴 상태이다. 당초의 취지에 맞게 세종시가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국토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려면 다음의 세 측면이 세종시의 모든 개발사업에 심도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당초 세종시 개발의 목표였던 지역간 균형발전 외에도 지역 내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 각종

인기 좋은 개발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외에 외곽의 편입지역에 대한 개발고려가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연계협력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면 도시경쟁력이 높지 못한 대전시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대전시의 내부 불균형의 심화, 대전시와 세종시 주변 농촌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종시도 대전시도 아직 주변지역의 개발을 추동할 수 있는 개발여력(spillover effects)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 세종시 개발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즉 조경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 스스로도 버리고 있는 전원형 조경도시의 환상을 탈피하여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세종시도 처음 개발기본계획부터 많은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세종시의 개발사업은 절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의 개발은 성급하게 계획되었고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과거 방식의 개발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수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세종시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건축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반환경적이며, 기후변화시대를 고려하지 못한 첨단구식 도시로서 결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도시구조와 도시기능을 만들고 있다. 인천 송도, 경기 동탄 도시와 유일한 차이가 중앙행정부서가 더 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기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을 수정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개발 시간표가 있고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세종시를 전 세계의 변화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고, 세계, 아시아, 우리나라의 경제공간의 재편 경향을 반영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점검할 때인 듯하다. 이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세종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도시평가’와 ‘스마트도시성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전 세계의 유력 도시에 경쟁할 수 있으면서 국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람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위해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도시, 건축물을 위해 사람들이 불편해야 하는 도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침단이라고 부르는 기반시설을 잔뜩 깔아놓아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 보기 좋은 도시외관을 자랑하고 싶어 비싼 에너지를 잔뜩 써야 하는 공간구성을 가진 도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구경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 도시 세종시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교통 및 도로체계, 건물배치, 공동주택건설 등등 모든 토지이용과 공간개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식의 도시계획가, 독창적인 예술자라는 건축가들의 케케묵은 이념에 사로잡혀 공산당 같은 도시계획, 건축물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때가 아니다. 이제는 계획적이지만 사람과

환경을 위해서는 매우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편하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갖기 어려운 지금의 개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세종시 역시 녹색교통을 가장한 자동차를 사랑하는 도시일 뿐이다.

이제 누구도 그 어느 정부도 세종시 개발을 거스를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은 계속될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나머지 개발을 더 잘할 것인가이다. 여기에는 많은 수정과 변경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개발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 때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다만 변화변경에 대한 번거로움과 귀찮음,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세종시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자. 앞으로도 시민들과 각계의 지혜를 모아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VI. 기타 자료

1.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도자료 등

Ⅵ. 기타 자료

1.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 연구모임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 연구과제명 : 세종특별자치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연구
- 구 성 원 : 7명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이경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간사	김연오	세종균형발전협의회원		
회원	강용수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선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최정섭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조수창	세종시청 균형발전담당관		
	강성규	세종시청 도시건축과장		

첨부 : 연구활동계획서 1부

신청인(대표자) 이 경 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대표자		이 경 대 의원
연 구 내 용	과제명	세종특별자치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연구
	목적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 부각 및 이전 여론 조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에 반영함
연구활동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1월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 구 활동비	소요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경대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귀하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사업 계획

- 이 연구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계획을 연구하여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화롭고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모임임
- 2013년도에는 세종시에 산재해있는 군부대와 관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단절되지 않는 도시계획을 위해 이전시기를 앞당기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개발자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군부대 이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따른 세종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인 논리 개발을 할 계획임

1. 추진방향

-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당위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
- 군부대 주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재산권 행사 강화 조치
-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논리의 타당성을 지원하고 향후 도시계획에 참여
- 현장 조사와 세미나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객관화하고 공감대 형성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역 주민 및 세종시 주둔 군부대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세종시 군부대 현황 파악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이전의 필요성 부각
 - 현장 조사 후 워크숍 개최하고 세미나를 통해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개발
 - 연구보고서를 발간, 활동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배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이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유도

3. 세부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세종시 군부대 이전 관련 전문가 연구 및 모임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및 모임 발족, 수시 회동
 - 사업비 : 1,000천원

(2)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 및 도시계획상 당위성 분석 보고

- 사업개요 : 세종시 군부대가 명품도시 건설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 사업내용 : 전문가 조사 및 분석(조사비, 분석비)
- 사업비 : 1,000천원

(3)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 및 민원인 입장에서 당위성 부각
- 사업내용 : 현장 방문 및 세미나 개최(현장방문 교통비, 세미나 비용)
- 사업비 : 2,000천원

(4)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013년 동안 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연구 성과 공유
- 세미나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론적인 근거 제시
- 종합보고서 발간으로 군부대 이전이 지속사업으로 확대
- 사업비 : 1,000천원

4.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3년 1월 중
- 연구회 발족 및 정기 모임 : 2013년 3월중
- 군부대 실태 파악 및 도시계획 조사 : 2013년 3월 ~ 8월
- 현장 방문 및 주민 불편사항 파악 : 2013년 5월중
- 수시 모임 및 간담회 개최 : 2013년 9월 중
- 세미나 및 보고서 발간 : 2013년 11월 중

5. 기대효과

- 군부대가 세종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여론 조성
-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밀착형 의정 활동 실현에 따른 긍정적 효과
-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완벽한 도시 계획을 이끌어내는 기반 조성

군부대 이전, 서둘러야 할 사업

강용수 의원, "도심 한 가운데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해야"

2012년 10월 16일 (화) 16:42:46



세종시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연결하는 지점에 군부대가 위치,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연서면에 위치한 군부대!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세종시 의회차원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예정지역과 북부 편입지역을 양분하면서 도심과 부도심을 단절시키는 군부대 이전은 도시계획 용역에서 필요성이 나왔지만 지난 임시의회에서 강용수 세종시의원이 구체적으로 거론, 여론을 환기시켰다.

강의원은 지난 9월 임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심장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은 항공기지, 유류 지원, 탄약보급 등의 시설이 46.27Km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예정 및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 투자가 위축돼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군부대 이전을 통해 세종시 균형발전의 개발 축으로 활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부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나 협의 대상이 국방부인데다가 이전 대상지 물색이 용이치 않아 필요성만큼 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재차 거론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와 관련,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에 이전 대상 군부대는 모두 10여개가 있으나 도시개발을 위해 시급한 곳은 연기면 연기리에 위치한 505,532 군용 기지다. 이곳은 예정지역과 조치원을 도심에 연결하는 점이지대에 자리 잡아 도시계획 자체를 단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유한식 세종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심활성화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비 부담이 큰 사업이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분류해놓고 국방부와 중앙정부와의 의견을 타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세종시는 사업비가 시 재정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방부에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직접 이전해주길 바라고 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체에서 군부대 이전 후 기존 부대 토지에 개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세워졌으나 사업비 자체가 엄청난 만큼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세종시 도시 발전 측면에서 군부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회 강용수 의원도 “세종시 한 가운데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방부에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세종시 의회 강용수 의원

항공기지주변 주민들, '뿔났다'

연서면 월하리 주민 등 50여명, 항공부대 이전 문제 주민설명회

2013년 01월 24일 (목) 17:04:13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실과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자리가 :~일 주민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관 :~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집근처 6m거리에 항공부대 하수처리장이 있어 살수가 없다” (차성권)

“비행기 시동 걸 때 창이 흔들려 벽에 금이 간 지가 오래다” (김광일)

세종시 연서면 항공기지구역 주민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처음으로 세종시에 전달되었다.

항공기 소음에다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세종시 출범으로 기지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과 함께 대책기구를 마련, 범 시민적인 군부대 이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별관2층 회의실에서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소속의원 : 강용수, 이경대, 김선무 의원)과 균형발전담당관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에서 분노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나왔다.

항공기지구역 내 거주자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연서면 월하리 일대에 위치한 항공부대로 인한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들은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

부대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가 나서서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항공부대는 그간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것이 세종시 출범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505, 532항공기지로 인한 소음발생 및 각종 재산권 제한 등 주민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더구나 532항공기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6생활권에서 불과 420m 떨어져있다. 특히 세종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가로막아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질의, 국무총리실 건의, 국방부 방문 및 관계자 협의, 국회의원 등에 건의, 국민 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및 협의, 육군본부 및 항공작전사령부 관련자 협의 등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항공부대 이전은 현재 답보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선무(세종시의회 부의장) : 이 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 의회 의원들도 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연구 활동 모임도 결성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겠다. 지켜봐주시고 관심 부탁 드린다.

▲조수창(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 항공부대는 세종시 내에서도 중심지역에 위치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접수, 재산권 보장 요구 등이 효과적이다.

▲권춘복(연서면 주민) :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알고 싶다.



재산권 제약(소음 등 불편 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

- ▲조수창(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 항공부대 인근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리하여 국가기관에 민원 제기 및 해결방안 모색하겠다.
- ▲안기은(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실) : 실질적으로 부대이전은 어려운 문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항공부대 이전과 관련한 담당부서가 없다.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항공부대 문제도 수년간 이어오면서 약 6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 ▲김선무(세종시의회 부의장) : 오늘 모임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한 관련단체조직의 결성도 가능하다.
- ▲김용욱(연서면 주민) : 나는 헤민 가든을 구입하여 철고 신축을 하려던 중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지역에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지 못하러 수리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
- ▲임중경(월하3리 주민) : 부대 이전 문제는 시간이 소요된다.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소송 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는 엄청난데 재산세는 걷어가고 세금도 안 깎아 준다. 정부는 월하리 주민들의 피해에 세금이라도 깎아주는 성의를 보여야한다.
- ▲차성광(월하4리 이장) : 집근처 6m 거리에 하수처리장을 지어 냄새가 나 살수가 없다. 과일나무는 비행기 바람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다. 2층짜리 집을 지으려니 부대가 보인다고 허가를 안내준다. 농사지

을 땅 약간 있다고 노인연금도 안주고 보상도 없다. 헬기 시동 시 소음으로 인해 TV시청이 불가하다. 집 벽도 갈라지는 피해를 입는다.

▲김광일(월하4리 주민) : 마을회관 앞에 격납고가 2개 있다. 비행기 시동 시 나무와 창문이 흔들리고 TV시청이 힘들어 볼륨을 올려야 한다. 비행기를 격납고에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 시동을 걸어 달라 부탁한다.

▲임중경(월하3리 주민) : 시설 재배 시 그린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현대의 농업방식이다. 월하3,4리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소음이 발생해 복숭아농사 시 피해를 본다.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소송 시에는 소송인이 피해를 입증해야한다. 전문가도 힘든 것을 농사꾼이 직접 해야 한다. 나는 부대 정문을 몸으로 막는 항의를 통해 월하리 중심부를 지나는 비행기 항로를 약간이나마 외곽으로 돌려놓았다.

▲차성광(월하4리 이장) : 우리 마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네가 부대 담장에 갇혀 있어서 타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부대 담장으로 인해 눈은 녹지도 않고, 귀를 찢는 소음에 농사가 안 된다. 눈이 오면 부대에서는 눈을 바람으로 담장 밖으로 날려버려 피해를 입는다. 월하4리 주민들에게 보상지원을 요청한다.

▲김학기(번암1리 이장) : 부대 이전 문제는 월하리 뿐 아니라 조치원, 세종시의 문제이다. 세종시로 진입하는 국도 옆에 항공부대가 있어 문제이다. 유한식 세종시장도 보여 주기 식 공약이 아닌 시민의 실생활에 달는 정책을 내놓길 요구한다. LED산업단지 투자 유치보다 항공기지 이전이 우선이다. 본인의 피해라고 생각하고 조치해 주길 바란다. 85명이 서명해서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무리이다. 인근주민들의 서명 등을 통한 동참을 요구한다.

▲이영민(번암2리 이장) : 큰 피해지역은 월하리, 번암리 아파트 489세대다. 앞은8층, 뒤는 12층 이상 건축 불가이다. 세종시민들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해결하자.

▲유양준(월하3리 이장) : 제일 급한 것은 건물 신축 불가에 관한 부분이다. 허가를 안내준다. 시에 항공기지구역 완화를 요청한다. 건물이라도 짓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수창(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 좋은 말씀이다.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사진 등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주민들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시청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 드린다.

▲김선무(세종시의회 부의장) : 설명회를 통해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부대 이전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시일이 소요된다. 군부대 이전 전에 재산세감면, 부대담장 점검, 하수처리장 이전, 항공기지구역 축소 등 세종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행정 소송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군부대 이전 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김선무 부의장

▲임중경(월하3리 주민) : 이 자리에 모인 김에 항공부대 이전 대책 주민 조직을 구성하자. 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이장 100여명, 부녀회 등이 모여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주민들의 서명을 충분히 받아서 부대 이전을 관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김용욱(연서면 주민) : 핵심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김선무(세종시의회 부의장) : 이 자리에서 전부 얘기할 수는 없다. 이장님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도움 드리겠다. 차후 조직규모, 범위 등을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일동: 대책위원회 구성 시 까지 임시로 김선무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모임을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 홈 : 뉴스 : 밀착취재 : 군부대 이전

군부대 이전, 논리적인 토대 마련하자

[밀착취재] 세종시 군부대 이전 모임 첫 회의..."세종시 발전에 기여"

2013년 02월 14일 (목) 14:54:38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 **임** 첫 모임을 갖고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 부각을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대~강용수~김선무 회원!

시의원들의 연구 활동 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14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올해 과제인 ‘군부대 이전’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인터뷰 동영상 보러가기\]](#)

이날 모임에서는 세종시 권역 내 군부대 실태 파악 및 도시계획 현황 조사, 현장방문 및 주민 불편사항 청취,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세미나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에 기여하는 모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경대 회장(새누리당, 전 연기군의회 의장)은 “세종시내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가 세종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모임이 결성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세종시 집행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선무 회원(민주통합당, 세종시 의회 부의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시작한 연구모임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겠다” 며 “특히, 연서면에 위치한 항공부대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용수 회원(새누리당, 세종시 의회 부의장)은 “세종시 도심 요소요소에 군부대가 위치해 도시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군부대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거론되면서 숙원사업이 된 곳도 있지만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활동 방향을 피력했다.

전문가로 이 모임에 참여한 최정석 회원(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은 “세종시 출범 이전 행복청에서 건설 시방서 작성과 연기군 시절 개발 계획에도 참여하는 등 세종시와 인연이 깊다” 며 “나름대로 애착도 많고 앞으로 세종시로 이사할 계획도 있어 세종시 건설에 새롭게 참여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 대표로 참석한 강성규 회원(세종시청 도시건축과장)은 “항공부대 문제는 평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고도 제한 등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서 수렴된 내용을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한 이 모임에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정석 중부대 교수,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임의수 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인 임의수 회원은 “의회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모임은 처음이어서 세종시의 특별자치시 출범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고 말하며 “지역 이슈를 개발하고 현안 토론을 통해 회원들의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 모임에서는 활동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확정하면서 항공부대 주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역할 분담, 사실상 기능이 다한 군부대 파악,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따른 신중한 접근 등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두 번째 모임은 3월 중에 개최하고 군부대 실태 자료 제출과 함께 이 지역의 도시계획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현지 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 홈 : 뉴스 : 밀착취재 : 군부대 이전

군부대 이전에 총력 기울인다

[밀착취재]오는 4월 1일 주민과의 대화갖고 여론수렴 예정

2013년 03월 13일 (수) 15:55:47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은 오는 4월 1일 군부대 주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을 통해 현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회장 이경대 의원)은 지난 12일 부의장실에서 모여 오는 4월 1일 군부대 이전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군부대 현황과 집행부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이전 사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첫 번째 과제로 세종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을 선정한 이 모임은 이전이 시급한 연서면 월하리 소재 항공부대와 소정면 유류지원대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군부대 이전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세종시로부터 그동안 활동 상황과 부대현황을 넘겨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군사보호 구역은 총 37.8 Km²로 전체 행정 구역의 8.13%를 차지해 인천, 경기, 강원, 서울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 순위로는 강원 2,408km², 경기 2,145km², 인천 379km², 서울 75km² 등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로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에서 과제로 선정된 군부대 이전 추진 대상인 연서, 연기면 소재 항공기지 두 곳 면적은 21.49km², 소정면 소재 유류지원대 0.94km² 등 모두 22.43km²로 세종시 전체 군부대 면적의 59.3%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균형발전 관련 공무원 등이 3차에 걸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 사령부를 방문하고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29일 유한식 시장은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방문하고 항공기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이전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소음, 악취, 진동,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기피현상에 따른 민원이 많다고 전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종시 관계 공무원들이 1월 23일 항공작전사령부를 찾아 부대 이전, 또는 비행 안전구역 축소와 일부 부대의 폐쇄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정부세종청사와 근접한 항공기지의 과도하게 지정된 군용항공기지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축소하거나 군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대시설 폐쇄를 건의했다.

특히,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에 군부대로 인한 단절현상이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세종시 의회 연구모임에서 군부대 이전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활동 상황을 전달받은 후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군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부대가 위치하면서 소음·진동·고동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서면 월하 :거리 일대

이 모임의 강용수 의원은 “조치원을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항공부대 이전 문제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연서면이 지역구인 김선무 의원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론을 군 당국에 전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연구회 이경대 회장은 “세종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군부대의 이전은 불가피한 과제”라며 “세종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에는 소재한 군부대는 모두 12곳으로 연서, 금남, 연기면 각각 2곳, 그리고 전의, 소정, 부강면 등에 주둔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민간 대책위 구성됐다

회장에 차선광 이장 등 회장 5명 선출하고 주민 입장 대변하기로

2013년 03월 22일 (금) 16:31:02



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가 : 22일 오후 2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돼 회장으로 차선광 월하 4리 이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세종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가 설립돼 1차 사업으로 항공부대 이전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소재 항공부대 주변 주민 대표 30여명은 22일 오후 2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 모여 항공부대 이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회장단을 선출했다.

대책회의 회장에는 월하 4리 차선광 이장, 부회장 쌍전리 이송원 이장, 유양준 월하3리 이장, 총무 김학기 번암리 이장, 감사 유현준 국촌리 이장 등이 선임됐다.

차선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피해가 많은 월하4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부대가 이전하도록 힘쓰겠다”며 “세종시 건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 1월 항공부대 주변 주민들과 세종시와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김선무 세종시 의원(연서면)에게 민간 대책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선무 의원은 “당장 민간 대책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해서 군부대 이전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모아 함께 대책을 마련하면 우리의 뜻이 이뤄질 것”이라며 “목표를 군부대 이전에다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회원으로 군부대 이전 과제를 추진하는 강용수 의원도 “군부대 문제는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 세종청사의 입주로 이 문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참석해 지난 1월 모임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우선 건축 민원에 대한 법적기한 준수와 관련, 세종시를 거쳐 군부대를 통하다보니 여기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항공부대와 협의, 법적 기한인 30일 이내 처리를 약속했다. 소음, 진동 등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행법상 구제가 불가능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악취발생은 군부대 정화조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는 9월 말이면 없어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제설 작업 시 인원과 장비 지원, 배수시설 확장, 지방세 감면 등 주민들이 제시했던 문제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 모임은 이경대 의원을 대표로 강용수, 김선무 의원과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 최정석 중부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1일 창립대회 겸 주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의회-주민 '군부대 이전' 에 힘을 모았다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창립총회 열고 본격 활동 나서

2013년 04월 01일 (월) 18:42:26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회원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이 정식 출범했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경대, 강용수, 김선무 의원을 비롯한 회원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첫 번째 과제로 ‘군부대 이전문제’ 를 제시하고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군부대 실태파악 및 도시계획 조사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 부각 ▲군부대 이전 여론 형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목표로 정하고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종시 내에 있는 군부대 중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전이 시급한 ‘연서-연기 항공부대’ 를 선정하고 군부대의 이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연구모임 대표 이경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전국에서 강원, 경기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며 “특히 연서, 연기 항공기지 부대는 소음발생 및 각종 재산권제한 등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 해소와 세종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항공부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며 “이를 위해 주민들과 협조, 정기적인 토론 등을 통해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항공부대인근 주민들과 ‘군부대이전 주민대책위원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연구모임의 창립을 반기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한 피해를 반증하듯 “그동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고 토로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

강용수, 김선무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이 자리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고 운을 떼며 “국방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대표 등과 공조하여 부대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차선광 주민대책위 회장은 “항공부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연구모임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지난 1월 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결의, 1차 사업 과제로 항공부대 이전문제를 다루기로 사전 협의하였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항공부대로 인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토의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세종시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관한 활동 현황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작업을 병행해 왔다.

지난달 22일 주민으로 구성된 ‘군부대이전 주민 대책위원회’ 가 결성된 이후, 이날 의회 차원에서 ‘도시계획 연구모임’ 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군부대 이전관련 사업추진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 이경대 의원 ▲간사: 김연오 세종균형발전협의회원 ▲회원: 강용수 의원 ▲회원: 김선무 의원
▲회원: 최정석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회원: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회원: 강성규 세종시 도시건축과장 ▲관계자: 임의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시계획 연구모임 회원들과 주민들이 항공부대 이전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적절인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민들 다양한 의견 개진

2013년 07월 30일 (화) 10:36:55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알 오후 시민 등 관계자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어울림과 창조의 도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다.

도시기본 계획은 세종시의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으로 국가 중추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 역사·문화·사람이 소통하는 ▲교류도시,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자족도시,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 도시로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 같은 도시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30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세종시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구지표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읍면지역에 사회적 증가가 20만 6천명, 자연적 증가 2천명과 예정지역 48만 명을 포함, 전체 인구는 예정지역 50만 명과 읍면 지역 30만 명을 합해 모두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8지구중심으로 나누고 예정지역을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 도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조치원읍은 북측 읍·면지역의 부도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런 공간구조 구성은 예정지역의 개발계획을 수용하는 공간구조로 현 여건 반영이 용이하고 예정지역 도심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과 함께 조치원읍 부도심 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축은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산업 및 연구 개발 축, 관광·휴양 축, 수변·생태 축으로 나눠 개발하고 전동에서 금남으로 이어지는 개발 잠재력을 갖춘 성장 축을 신설, 예정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인 녹지 축과 수변 축을 만들기로 했다.

생활권은 북부지역을 제외한 동,서,남,중부권에는 예정지역을 포함시켜 권역을 만들었으며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한 상생균형발전과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각 권역별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북부지역은 소정, 전의, 전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주거단지,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 등과 운주산 및 비암사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전의면 조경·묘목을 활용한 특화단지 육성 등이 개발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조치원, 연서, 연기, 예정지역 일부가 포함된 중부지역은 유통산업, 대학촌,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 등과 함께 산·학·연을 이용한 신규 산업단지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연동, 부강과 예정지역으로 구성된 동부지역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농업지원 시설 단지 조성을 통한 특화단지 육성, 그리고 물류 기지 확충 및 도시 근교권 휴양·관광 사업 발굴 및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되어 있다.



장군면과 예정지역, 금남면과 예정지역으로 만들어진 서부와 남부지역은 백제 문화권과 인접한 역사·문화벨트 구축과 농산물 먹거리 활성화를 통한 특화단지 육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생활권 기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조치원읍은 주요 공공기관 이전 시설 활용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흥익대, 고려대를 활용한 대학촌 활성화, 서창역, 조치원 역 주변 원도심 기능 강화, 경부 철도로 단절된 동·서 지역 간 연계 방안, 조치원 중심기능 및 자족 기능 강화 등을 기본계획에 넣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환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맨 먼저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세종시 서북측 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공주와 논산 등지에서 접근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건설될 경우 연결이 용이하다" 며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목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정우 목원대 교수는 "교육시설은 어느 곳이든 신도시에서 초기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에 도시가 정착이되면 남아돌기때문에 교육청에서 원하는 수준의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며 "현실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도시계획안은 지금의 트렌드와는 맞지않다"고 전제,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성장지향적인 점과 시민과 현장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공급중심적"이라고 지적하고 "통계청 추산과는 너무나 다른 인구산정문제와 통합적 공간구조 마련이라는 도시계획 목표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시 김선무 시의원은 "개발 축이 국도 1호선으로 단선화되어 있는 것을 전의에서 쌍류-정안 IC를 잇는 연결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녹지지역 공간배치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 홈 : 뉴스 : 밀착취재 : 군부대 이전

세종시 민원현장 첫 조정회의 열린다

항공부대 이전과 조정 회의에서 민원인 의견 반영한 결과 나올 듯

2013년 09월 25일 (수) 16:13:28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은 :알오전 회의를 갖고 세종시 균형개발담당관으로부터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세종시에서 민원 현장 첫 조정회의가 열린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세종시 연서면 소재 육군 항공학교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토대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민 2,600명이 "항공학교로 인한 헬기소음 및 진동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다"며 "비행장 때문에 세종시 균형적인 도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행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27일 오후 3시20분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충남소방항공대를 현장 방문조사하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신청인 대표로 3명이 참석하고 유한식 세종시장과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국방시설본부 총청시설단장 등이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를 내놓고 의견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월하리 항공부대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 모임은 25일 오전 9시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조수창 균형개발담당관으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진행상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대 회장은 “주민들이 항공부대 이전을 원하고 세종시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불기피한 사항이어서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강용수 의원은 “조치원 외곽에 위치한 예전 32사단 주력부대가 국곡리로 이전된 만큼 이 부대의 이전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며 핵심시설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김선무 의원은 “군부대 이전에는 월하리를 비롯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활기'

연기비행방 통합, 유류지원대 이전으로 활동에 탄력받아

2013년 09월 29일 (일) 21:13:31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이 연기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과 통합으로 세미나와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연기 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과 통합으로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올해 연구 과제로 세종시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항공부대와 소정리 유류부대 이전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국방부와 세종시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왔다.

도시계획연구모임에는 군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구를 둔 이경대(전의), 강용수(조치원읍), 김선무(연서면)의원 등이 최정석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조수창 세종시 균형개발담당관, 강성규 세종시 도시건축과장, 김연오 세종균형발전협의회원 등과 한 팀을 이뤄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향후 세종시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을 연구해왔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대표와 세종시,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와 조치원 비행장 통합으로 현장조정회의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자 도시계획연구모임은 주민 설명회와 세미나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일정 수정과 함께 위원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세종시의 보고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 모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은 국민권익위의 민원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25일 세종시로부터 그동안 군부대 이전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전달하고 차질 없는 이전, 또는 통합을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경대 의원은 “소정리에 소재한 유류지원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항공부대도 연기 비행장이 통합되면서 고도제한구역 축소로 재산권 행사 제약이 완화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선무 의원은 “이번 현장 조정회의의 결과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종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강용수 의원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활동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도심 군부대 이전을 실현한 지역 견학과 세미나를 개최, 군부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비행장 통합에 이어 32사단이 국곡리로 핵심시설이 이전하면서 연서면 월하리 일대 옛 32사단 장소가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내년에는 이들 지역의 완전 이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홈 : 뉴스 : 밀착취재 : 군부대 이전

도시계획연구모임, 군부대 현장방문

세종시 의회 연구모임으로 유류지원대 이전 이후 대책 협의

2013년 11월 16일 (토) 07:36:49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 ~~월~~오후 : ~~저~~ 소정면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고 이전 이후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15일 오후 2시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소재 종합보급창 제22유류지원대 주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대 이전 이후 대한 토양 복원 계획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장방문에서 관계자로부터 부대이전계획 및 토양복원 공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경대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개발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데다가 북부지역의 소외가 심하다" 며 "도시계획연구모임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부대의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용수 의원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은 세종시 도시계획 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만큼 이전 이후 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고 당부하고 "세종시 의회에서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좋은 과제를 선정,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위원들은 소정면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제33유류지원대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전 이후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 3월에 발족된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올해 연구과제를 세종시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 이전으로 선정, 월하리 항공비행장의 고도제한구역 완화와 조치원 비행장의 합병 등을 이끌어냈다

이 모임에는 세종시 의회에서 김선무, 강용수 부의장이 위원, 이경대 의원이 대표를 맡아 참여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세종시 관련 부서, 그리고 실무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기비행장 폐쇄, 보람느꼈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한해활동 마무리 모임가져

2013년 11월 29일 (금) 16:03:03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 "일·올해 활동을 결산하는 마무리 회의를 갖고 연기비행장 폐쇄와 유류지원대 이전을 이끌어 낸 성과를 평가했다"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이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라는 성과물을 거두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세종시 숙원사업인 연기 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으로 합병과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데 이어 소정면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의 이전 결정에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도시계획연구모임은 29일 오후 2시 세종시 의회 부의장실에서 올해 마지막 모임을 갖고 한해 활동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경대 도시계획 연구모임 대표는 "올해 군부대 이전을 과제로 설정, 많은 성과를 이뤄 낸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여러 위원들의 덕분"이라며 "항공부대 이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정면 33유류지원대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 관련,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으로 참여한 김선무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연서면 항공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항공기지 구역 축소와 비행항로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을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 이전 상황을 지켜보고 군부대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수 세종시 의회 부의장도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도시계획연구모임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되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며 “보통리 비행장을 폐쇄하고 고도제한 구역을 완화한 것은 이 연구모임의 성과물 이전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임의수 위원은 “모임 결성 이후 의원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지를 보고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변모된 의회상을 볼 수 있었다”며 “군부대와 관련된 과제에서 오는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연구활동의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전문위원으로서 긍지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세종시청 도시계획 실무 담당자로 위원이 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올해 도시계획연구모임에서 군부대 이전 등 논의된 사항을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실무 차원의 반영의사를 보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모임이 많이 나와 세종시 발전이 기여하도록 집행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간사를 맡은 김연오 세종균형발전협의회원은 “도시계획연구모임이 첫해에 만들어 낸 비행장 폐쇄 합병과 유류지원대 이전은 세종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결과물”이라며 “이 모임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끔 시민 대표로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 출범한 세종시 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은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로 인해 세종시 도시계획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군부대 이전을 올해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 군부대 당국과 접촉을 통해 일부 비행장의 폐쇄, 유류지원대의 이전을 가져왔다.

또, 5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종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주민 여론을 조성해 세종시에서 군부대 당국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참여와 지원을 해주었다.